

---

**종합자산관리 및 자금조달기능 강화를 위한**  
**신탁업 혁신 방안**

---

2022. 10. 13.

금 융 위 원 회

## I. 추진 배경

- **(추진배경)** 美·日 등 주요국에서 신탁은 가계 재산의 운용·관리·이전 등을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는 종합재산관리 수단으로 널리 활용

\* GDP 대비 신탁 수탁고(% '20) : [日] 173 [美] 94 [韓] 53

- 또한, 혁신기업 등이 보유자산(지재권 등) 유동화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신탁 활용

- **(현황)**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신탁 본연의 장점을 활용한 신탁 상품·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상황

- 우리나라 신탁시장은 금융상품 판매 목적의 금전신탁과 부동산신탁(개발사업·담보대출 등) 위주로 발전하여, 신탁의 다양한 기능 활용 제한

\* 신탁재산별 비중('21말) : [금전] 50%(570조원), [부동산] 35%(403조원), [종합재산] 0.04%(0.6조원)

- 반면, 고령화, 국민재산축적 및 복지수요 증가 등 사회·경제구조 변화로 새로운 자산관리 및 자산유동화 등 재산의 적극적 활용 수요 증가

- (i) (종합재산관리) 신탁이 금융상품 판매채널\*로 활용중이고, 非금전 재산에 특화된 전문업자 부재\*\* ⇨ 종합재산관리 기능 육성 필요

\* 소위 "상품성 신탁" : 편입상품을 신탁업자가 미리 정한 금전신탁(은행 ELT등)

\*\* 인가단위별 신탁회사 현황(개, '21) : [종합] 38 [부동산] 14 [금전] 9 [非금전] 0

- (ii) (자금조달) 신탁 재산의 유동화 등 적극적 재산활용 수요\* 증가  
⇨ 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제도화하면서 적정 규율 필요

\* [예] 부동산, 저작권 등을 기초로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는 5개 조각투자 서비스를 혁신서비스로 지정중

- (iii) (상품다양성) 가업승계·후견·복지 등 신탁으로 구현 가능한 다양한 신탁 서비스 未발달 ⇨ 고령화 시대에 유용한 다양한 상품 출현 지원

- (iv) (소비자보호) 재산 소유권이 이전되고, 장기간 유지(예:死後까지) 되는 상품인 바, 두터운 소비자 보호 필요 ⇨ 수탁자 책임 강화 추진

⇒ 신탁 본연의 장점을 활용한 가계의 종합재산관리, 중소·혁신기업 자금조달 등이 가능하도록, 신탁업 제도 개선 추진

## II. 신탁업 혁신 방안

### 기 본 방 향

◇ 투자수단으로서의 신탁이 아닌, 다양한 재산을 종합적·적극적으로 관리(all-in-one care)하는 신탁 본연의 기능 활성화

#### 1 종합재산관리 기능 강화

- ① 취급 재산 다양화
- ② 신탁회사의 비금융 전문기관 활용 제고

#### 2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

- ③ 신탁을 통한 수익증권 발행 허용

#### 3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신탁

- ④ 가업승계신탁·주택신탁 관련 제도 정비
- ⑤ 복지신탁 활성화(장애인신탁·후견신탁 등)

#### 4 소비자 보호 관련 규율 정비

- ⑥ 행위원칙 강화(선관의무 등)
- ⑦ 신탁 보수·홍보 등 관련 관행 개선

### 1 종합재산관리 기능 강화

◇ ①취급재산 다양화, ②전문기관을 활용한 전문적인 신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탁업의 종합재산 관리 기능 강화

#### ① 취급재산 다양화

□ 시장수요가 큰 ①채무, ②담보권 등을 신탁가능 재산에 포함

※ (현황) 자본법 §103에서 신탁가능 재산으로 「금전, 증권, 금전채권, 동산, 부동산, 부동산 관련 권리, 무체재산권」의 7가지 재산 열거

① (채무) 재산신탁시 동 재산에 결부된 채무의 신탁을 허용\* (例: 주담대)

\* 과도한 채무신탁에 따른 신탁계정 부실화, 채권자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, 순재산이 (-)가 되는 수준의 채무수탁은 제한

② (담보권\*) 재산의 原소유자(위탁자)가 담보권신탁대출 실행을 위해, 재산에서 담보권만 분리하여 신탁할 수 있도록 허용

\* 소유권이 이전되는 담보신탁대출 대비, 위탁자의 안정적인 재산사용이 가능하고 (고객친화적), 수탁자도 예상하지 못한 법적책임에 대한 부담이 없음

【담보권신탁대출과 유사 구조와의 비교】

구 분		담보신탁대출	담보권신탁대출	담보권설정
구 조				
특징	소유권이전	有(소유권자=신탁업자)	無(소유권자=原소유자)	無(소유권자=原소유자)
	原소유자 사용권	사용권 제한	사용권 보장	사용권 보장
	수탁자 책임	大(∴ 무과실책임도 부담)	小(∴ 소유권未이전)	해당없음(신탁이 아님)
	도산격리성(담보력)	强	弱(∴ 소유권 未이전)	弱(∴ 소유권 未이전)
	상대적 금리수준	低	中	高
	담보권관리	용이(∴ 수탁자 일괄 관리)	용이(∴ 수탁자 일괄 관리)	어려움(특히, 신디론)

➡ (기대효과) 고객 재산상황·목적 등에 맞는 맞춤형 신탁\* 확대

\* 例 : ① [채무신탁] 해외 장기체류 중인 주재원, 재산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 등이 잔여채무(주담대)가 존재하는 주택도 신탁을 통해 관리 가능

\*\* 例 ② [담보권신탁]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는 신디론에서 담보권 관리를 1인(신탁업자)에게 집중시킴으로써, 채권자간 이견 발생시에도 안정적인 담보권 관리 가능

## ② 전문기관을 활용한 전문화 ·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

□ 분야별 전문기관(병원, 회계·세무법인 등)을 통한 전문화된 신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, 신탁업무 위탁 관련 자본법 규정 정비

※ (현황) 자본법 업무위탁 규정(§42)은 신탁법 원칙과 상충되는 측면\*이 있고, 본질적 업무 위탁시 진입요건이 높은 신탁업 인가가 필요 ➡ 분야별 전문기관 참여 곤란

\* 例 : [자본법] 사후통지만으로 업무위탁 가능 ↔ [신탁법] 수익자 사전동의 필요(자기집행원칙)

① (적정성심사) 신탁업자(금융회사)가 자신의 업무 일부를 맡길 전문기관의 적정성을 심사 및 평가\*

\* [例] 업무관련 업력, 인적 전문성, 자본 적정성, 재무적 안정성, 이해상충 가능성 등

② (영업규제) 자본법상 신탁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인 바, 업무위탁 관련 자본법 규제\*를 원칙 적용(자본법§42)

\* 업무처리 기록 유지,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, 업무위탁 운영기준 설정 등

- 신탁업자(금융회사)의 非금융 전문성을 보완하는 취지의 제도이므로, 전문기관의 금융기능은 제한하고, 신탁 특성에 맞게 규율체계 정비\*

※ [예] ① 전문기관은 인가·등록을 받은 자가 아니지만, 본질적 업무 위탁도 허용  
② 고객의 事前동의를 득한 경우에만 업무위탁 허용 / ③ 再위탁 불허

- 한편, 전문기관은 신탁업무 일부를 맡은 자로서, 자신이 업무 일부를 수행중인 신탁계약에 대한 투자권유(소개) 가능\*

\* 현행법 상으로는 신탁업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 외에는 신탁계약에 대한 투자권유 불가  
☞ 제도 개선시, “요양병원이 환자에게 자신이 업무위탁 중인 유언대용신탁 계약 권유 가능”

③ (사후관리) 신탁업자가 전문기관의 적정성을 심사한 바, 1차적으로 신탁업자가 전문기관을 주기적으로 관리·감독

④ (금융당국) 사전신고-사후감독으로 업무위탁 규율 확립

- (사전신고) 신탁업자는 전문기관 현황 및 적정성 심사결과 등을 금융당국에 사전신고한 후, 업무위탁 가능
- (사후감독) 신탁업자의 전문기관 감독 결과 문제 발견시 금감원에 보고하고, 금감원은 전문기관 검사 및 위탁계약 취소·변경명령可

➡ (기대효과) 신탁업자가 다양한 재산을 수탁받고, 이를 분야별 전문기관에 맡김\*으로써, 전문적·맞춤형 재산관리 기능 강화\*\*

\* 非신탁업자인 전문기관은 신탁업자로부터 ①업무 일부를 위탁(업무위탁)받을 수는 있지만, ②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再신탁은 不許(再신탁은 신탁업자 간에만 허용)

\*\* [예] 세제 및 법률자문에 전문성 있는 법무법인 ☞ 유언대용 신탁 전문기관  
특허권 관리·활용 등에 전문성 있는 특허법인 ☞ 지식재산권(IP) 신탁 전문기관  
치매노인 돌봄 및 요양에 특화된 의료법인 및 병원 ☞ 치매·요양 신탁 전문기관  
애완동물 관리에 전문성 있는 동물병원 ☞ 애완동물 신탁 전문기관

◇ 非금전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되,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①발행-②판매-③운용 등 단계별 규제 정비

※ (현황) 非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이 제한되고 있으나, 제도 활용 수요 증가\*

☞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면서, 유사기구와의 동일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

\* 부동산·저작권 등 다양한 재산을 기초로 수익증권 발행(현재 5개 조각투자 서비스를 혁신서비스 지정)

① (발행)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한 ①재산종류, ②발행자, ③재산구성, ④발행한도, ⑤발행형태, ⑥증권신고서 등 규제체계 정비

① (재산종류) 금전을 제외\*한 모든 재산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 허용

\* 금전신탁 수익증권은 사실상 펀드(집합투자업)와 유사함을 감안해 제외

- 단, 제도 도입취지(非유동자산의 유동화), 중소·혁신기업 유동화 수요,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, 재산별로 발행 제한 등 규율\*

\* [예] 부동산(관리처분신탁 한정)·금전채권(非금융법안기업이 위탁한 경우 한정)·무체재산권 ☞ 원칙적 허용  
증권·동산·부동산관련권리·담보권 ☞ 혁신서비스 지정 건 등에 한해 개별 허용

② (발행자) 부동산 신탁수익증권 발행은 부동산신탁사만 허용\*,  
여타 재산은 해당 재산 신탁이 가능한 은행·증권·보험 모두 허용

\* 부동산 수익증권 발행신탁은 부동산 펀드와 유사한 바, 전업주의 체계를 존중하여 제한.  
단, 부신사의 경우, 리츠AMC로서 부동산 펀드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중인 점을 감안해 허용

#### 【신탁가능재산별 수익증권 발행】

구 분	부동산	금전채권	무체재산권	증권	동산	부동산관련권리	담보권	금전
허용여부		○				△(건별 판단)		X
발행자	부신사				은행·증권·보험			X

③ (재산구성) 단일 종류 재산\*으로 구성된 신탁만 수익증권 발행 허용

\* 여러 재산으로 구성된 신탁은 가치평가가 곤란하고, 투자자 이해 가능성이 낮음

④ (발행한도)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액內로 발행총액 제한(할증발행 금지)

⑤ (발행형태) 실물발행을 금지하고, 전자증권 발행만 허용

⑥ (증권신고서) 공모일 경우 집합투자증권 신고서 수준의 증권신고서  
규제\*를 적용하고, 유동화법에 준하는 자산유동화계획\*\*도 첨부

\* [예] 신탁업자·위탁자 관련 사항, 비용 및 과세 관련 사항, 신탁재산 평가·공시 관련 사항 등

\*\* [예] 유동화 대상 신탁자산 세부명세, 신탁재산 평가 내용, 신탁재산 관리 계획, 수익증권 종류 등

⑦ (부실재산유동화방지) 原소유자(위탁자)·신탁업자(수탁자)의 <sup>(i)</sup>증권신고서 공동 제출\*, <sup>(ii)</sup>각각 일정비율(例:3%) 후순위 신탁수익권(증권) 보유 의무화

- \*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原소유자(위탁자)의 재무·영업현황 등도 중요한 고려 요소인 바, 위탁자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여 부실재산 유동화(먹튀) 방지(일본도 동일)  
☞ 증권신고서 허위부실기재시, 재산 原소유자도 형사처벌(5年이하징역),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

② (판매) 수익증권은 아직 정형화되지 않았고 시장에서 익숙치 않은 상품인 점을 감안해, ①판매처를 인가하고, ②행위·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

① (판매처) 현행 펀드 투자매매·중개업 인가사례, 업권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신탁수익증권 투자매매업\*·중개업\*\* 인가단위 마련

- \* 투자매매업 : [증권] 인수포함인가, [은행·보험] 인수제외인가, [부신사] 불허  
\*\* 투자중개업 : 증권사만 우선 허용하되, 제도 안착 상황 점검후 단계적 확대 검토

② (행위·판매규제) 투자매매·중개업에 적용되는 자본법상 행위규제\*, 금소법 판매규제\*\*를 동일 적용하고, 계열사 판매 제한(例:25%) 도입

- \* [例] 자기계약 금지, 최선집행의무, 불건전영업금지 등  
\*\* [例] 설명의무, 적합성·적정성원칙(현행 펀드위험등급을 수익증권에 적용시 최고위험등급으로 분류) 등

③ (운용 등) 펀드 관련 규율을 준용한 ①정보제공 규제를 도입하고, 규제차익 발생 방지를 위한 ②운용규제 장치 도입

① (정보제공) 제3자 확인\*을 거쳐 자산현황(기준가격 등) 및 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벤트 등 공시, 투자자의 장부·서류열람권 보장 등

- \* 수익증권발행신탁은 펀드와 달리 신탁업자가 운용·수탁·판매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바, 정보공시前 제3자(예탁결제원, 펀드 일반사무관리회사, 회계법인 등 활용 검토)의 확인 의무화

② (운용규제) 증권신고서에 명시한 신탁재산의 관리·처분과 이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배분 外에는 운용행위 금지\*

- \* 재산운용 결과 발생한 금전은 예금 예치 등만 허용 ☞ 수익증권이 운용(펀드)이 아닌 유동화 수단으로만 활용되도록 유도

➡ (기대효과) 유동화법 등 기존 제도를 통한 자산유동화가 어려웠던 중소·혁신 기업\*의 보유자산 유동화 및 자금조달 지원

- \* 유동화 대상 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신용도 제한(더블B이상) 때문에, 업력이 짧은 혁신기업,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중소기업 등은 유동화법을 활용한 자금조달에 한계

- 조각투자, 주식소수점 거래 등 혁신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마련



◇ ①가업승계 신탁, ②신탁된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 허용, ③복지신탁 활성화 등을 통해, 고령화시대에 맞는 다양한 신탁상품 출현 지원

① **(가업승계신탁)** 중소·중견기업이 신탁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, 의결권 행사 관련 제도 등 정비

- 중소·중견기업 가업승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\*에 편입된 주식은 온전히 의결권 행사\*가 가능하도록 허용

\* 現자본법은 신탁업자의 신탁을 통한 우회적 지분 취득을 막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15%로 제한  
☞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신탁의 경우에도 의결권 행사가 15%로 제한돼, 제도 활용에 어려움

※ [例] ① 중소·중견기업 사주가 위탁자이고 생전 수익자일 것, ② 사주가 자사주를 신탁할 것  
③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위탁자 생전에 설정된 신탁일 것  
④ 신탁업자가 가업승계신탁의 명칭으로 신고한 약관에 따라 체결된 신탁일 것

② **(주택연금)** 現주금공법상 “개인” 소유 주택만 주택연금 가입 가능  
☞ 주택신탁시 소유권자가 변경(개인→신탁업자)되어, 주택연금 가입 어려움

⇒ 주택이 고령층 주요재산인 점을 감안해, 주택연금 가입 요건 충족시 신탁된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

③ **(복지신탁)** 행위능력이 부족한 수익자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, 후견·장애인신탁 활성화 ☞ **관계기관 협의 필요\***

※ [例] 후견신탁 관련 협의 필요사항

- 법정후견 개시 당시 피후견인 재산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, 신탁 활용 권고

\* [日] 후견인의 재산유용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재판소 주도로 후견신탁 도입<sup>(12)</sup> 및 활용 권유  
☞ 전체 성년후견의 약 10%가 후견신탁을 활용 중인 것으로 추정

※ 신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**세제지원 방안** 등은 향후 검토 예정

➡ (기대효과) 중소·중견기업의 **안정적 가업승계**, 신탁된 주택의 **활용도 제고**, 후견·장애인 신탁을 통한 **맞춤형 복지 수요** 충족



- ◇ ①행위원칙 강화, ②신탁보수 규율, ③종합재산신탁 규율 정비, ④홍보규율, ⑤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, 신탁업 활성화에 걸맞는 소비자 보호 추진

- ① **(행위원칙)** 자본법상 미흡한 일부 수탁자(신탁업자) 행위원칙을 ❶신탁법 수준으로 상향하고, 일부 원칙은 ❷신탁법+a 수준으로 상향

❶ (신탁법 수준 상향) 多數 수익자에 대한 **공평의무** 신설

❷ (신탁법+a 수준 상향) 신탁업자의 주요 행위원칙인 **선관의무**를 미국 등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\*

\* [韓] 선량한 관리자로서 "주의"를 다할 것, [美] "주의+전문성"을 다할 것

- ② **(신탁보수)** 1:1 계약보다는 금투상품의 성격이 강한 **상품성신탁**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 수취 관행 마련

❶ 상품성신탁은 구조가 정형화돼 비교 가능성이 높은 바, 편입상품, 보수율 등을 금투협 홈페이지에 공시

❷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방법에 대한 선택권 부여\*

\* [例] 고객에게 "1회성 수수료 선취" 또는 "주기적 신탁보수 수취" 옵션을 모두 제시하고, 각 옵션의 가입기간별(예: 3, 6, 12개월) 비용 차이를 비교 설명

- ③ **(종합재산신탁 금전운용)** 일반 금전신탁에 적용되는 설명의무\*·운용규제\*\* 등을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의 운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

\* 계약체결·변경시 금전운용내용을 설명하고, 위탁자가 그 내용을 자필기재

\*\* 비지정형 운용의 경우,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하게 운용하고, 운용내역 분기별 제공

- ④ **(홍보규율)** 상품성 신탁에 대한 홍보제한은 유지하되, 유언대용·후견·가업승계 등 신탁계약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홍보 허용

- ⑤ **(거래투명성)** 신탁재산으로 대외거래시 **신탁재산임을 표시**하도록 유도

⇒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반영한 자본법 등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\*

\* 자본법 개정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(~22말) → 자본법 개정안 국회 논의(23.1분기)